

“난개발·환경오염 막고 주민 알권리 보장”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지역 농촌·주민 살리는 ‘7대 주민주권 조례’ 지방선거 공약 채택 촉구

전북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대표 이정현)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회원 100여명은 지난 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농촌과 주민을 살리는 7대 주민주권 조례’의 지방선거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험은 지역과 농촌으로 떠넘겨지고, 이익은 개발업자가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주민의 힘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정한 대표의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하승수 공약발문센터 농본 대표가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완주, 고창 정읍 김제 등 각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석산 개발 폐목재 화력발전소 등 지역별 환경 현안과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재 농촌은 인구 감소보다도 주민 몰래 추진되는 유해시설과 환경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며 “개발과 인허가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에너지 수요가 지방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유해시설이 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회원 100여명은 지난 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농촌과 주민을 살리는 7대 주민주권 조례의 지방선거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역과 농촌에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루 100톤 이상 소각시설만 평가 대상이 되는 현행 기준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관점으로 평가가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북은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해 하루 50톤 이상 소각시설을 평가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마저도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민들은 개발이 확정된 이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회의 공개와 사전 고지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안한 7대 주민주권 조례는 △개발사업 사전고지 △위원회 회의 공개 △환경영향평가 강화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도시·군계획 검증 절차 개선 △폐해조사 지원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단체는 “이번 지방선거는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해당

조례를 당론으로 채택해 주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말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라며 “정치가 응답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로 전북지역 난개발 현안을 상징하는 상황판을 ‘조례 꽃 화분’으로 바꾸는 행사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 개선을 요구하는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만호 기자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김광석 제35사단장, 예비군 지휘관 및 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도,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예비군 사기 진작과 노고 격려·유공자 8명 표창·군악대 연주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지역 안보의 핵심 전력인 예비군의 사기 진작과 노고 격려에 나섰다.

도는 지난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김광석 제35사단장, 예비군 지휘관 및 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예비군 창설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항보방위에 헌신해 온 예비군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앞에는 예비군 50여

년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함께 전북지역 방호를 담당하는 예비군 장병이 함께 전시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35사단 군악대의 축하 연주로 시작해 표창 수여,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추사,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예비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결속을 다지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예비군 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완주군 기동대장을 비롯한 유공자 8명이 표창을 수상, 참석자들의 축하를 받았다. /오만호 기자

도, 도내 친환경 농산물 유통현장 점검

김중훈 경제부지사, 고산농협 산지유통센터 방문

면세유·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책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완주군 고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가 운영 중인 비상경제대응IT의 일환으로,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 현장의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산농협은 2025년 기준 382농가(374ha)와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전체 유통량의 절반 수준인 3,003톤을 학교 급식과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등에 공급하고 있다. 공공급식과 연계된 안정적 수요를 기반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날 김 부지사는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과 선별·포장·축하 등 유통 전반을 점검하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과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어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찾아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순환 체계 운영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비료와 포장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시설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생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어려움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인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기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용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도,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 조사 착수

군산 등 도내 3개 시·군 15개 지점 정기 모니터링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 상승으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도내 서해안 연안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유행예측 조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군산·고창·부안 주요 서해안 3개 시·군 15개 지점에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수 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발열과 전신 쇠약감,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이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명률은 39.8%에 달한다. 특히 간 질환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에서도 2022년 사망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85℃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 조리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 접촉 금지 △어패류는 5℃ 이하로 신속히 냉장 보관 △조리 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 △날생선용 도마와 칼은 구분 사용 및 소독 등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예방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신속히 공유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지방도·위임국도 보행환경 정비 본격화

도, 정읍·남원·순창 등에 신설·보도 보수 병행 추진... 31억 투입·9월 말 준공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31억원을 투입해 2026년 지방도·위임국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도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손된 구간을 정비하고, 보도가 없는 구간에는 신규 보도를 설치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사고 예방과 통행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은 오는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보수와 신설을 병행해 추진된다. 남원시 산내면·수지면 소재지 일원 정읍시 정우면 망담마을 앞 순창군 북흥면 소재지 일원 등은 우선 정비 구간

으로 선정돼 보수 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군산시 대야남초등학교 구간, 익산시 낭산면 소재지 일원, 무주군 상오정마을 구간 등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와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행정절차 완료 즉시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2km 규모의 보도가 신설된다.

위임국도 구간 개선도 별도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국도상 보도설치 5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국비 22억원을 투입해 무주 무풍면 일원 국도 37호선 약 2.1km 구간 보행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계획을 거쳐 9월 공

사에 착수한다.

도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보행환경 정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수립한 ‘지방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중장기계획(2023~2027)’을 기반으로 우선순위 중심의 정비를 이어가고 위임국도 역시 국가계획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형삼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도 및 위임국도의 보행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보행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RISE 1차연도 평가 앞두고... 다양한 현장 의견 듣는다

전북RISE센터, 연차평가 간담회... 대학·학생·주민 100여명 참석·지역과 대학 학생 체계 구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의 1차연도 평가를 앞두고 대학과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JRI산학협력단 전북RISE센터는 지난 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전북RISE사업 연차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RISE사업의 연차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호식 전북자치도 교육협력과장장과 채수찬 전북RISE센터장을 비롯해 도내 13개 참여 대학, 학생, 주민, 시·군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연차평가 계획안 설명, 사업 추진 현황 및 2026년 추진 방향 안내,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RISE사업은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202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전북RISE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JRI산학협력단 전북RISE센터는 지난 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전북RISE사업 연차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축적해 온 기업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전북RISE센터는 단년도 성과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연차평가를 1차연도 성과를 진단하고 2차연도도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서열화를 지양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2차연도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으며, 센터는 이를 검토해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채수찬 전북RISE센터장은 “RISE사업은 대학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함께 혁신의 토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평가가 대학에는 스스로의 방향을 점검하고, 센터에는 더 나은 지원 방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 이달부터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2017~2018년생 일부 아동 1~3월분 소급 지원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 지원과 함께 기존 지급이 종료된 일부 아동에 대해서는 1~3월분 소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지원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되며,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본 10만 원에 추가 지원을 더해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비수도권 지역은 월 10만 5,000원, 정읍·남원·김제 등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월 11만 원,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특별지역은 월 12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올해 1~3월분 수당을 소급 지원한다. 해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되며, 보호자에게는 문자 안내를 통해 절차가 안내된다. /오만호 기자

전북환경청, 202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30일까지 사업장 조사표 제출

전북지방환경청이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4월부터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도내 예상 대상 사업장은 약 1천466개소로, 해당 사업장은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 접속해 올해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2025년 한 해 동안의 화학물질 제조·사용량과 대기·수계·토양 배출량 폐기물 및 폐수에 포함돼 외부 처리업체로 이동된 양 등을 4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